광주·전남 교사들, 학부모 갑질에 멍든다

나주에서 중학교 교사로 근무중인 이모(여·45)씨는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스트레스가 쌓인 끝에 최근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다. 평일·주말 할 것 없이 학부모 항의 전화를 받는 것은 일상이 됐고, 수업 도중에 학부모가 교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담임 교사 나오라"는 망신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자기 아이에 대한 부족함 없는 케어를 바라면서도 학생에게 싫은소리 한 번 못하게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지난해 광주시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이모(여·30대)씨는 1년 내내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끝에 결국 올해 경기도로 전출했다. 이씨가 가르치는 학생 한 명이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맞았다"고 거짓말을 하자, 학부모가 이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씨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 교사 직업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었다"며 "광주에서 근무를 계속하면 그 학부모와 마찰이 끊이지 않을까봐 먼 타향으로 옮기게 됐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등굣길 헌화하는 학생 한 초등학생이 20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18일 한 담임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연합뉴스

민원 스트레스에 우울증·시달림 끝 타지역 전출…보호받지 못한 교권
광주·전남 상담·심리치료 3년간 3000건…서울 극단 선택 남의 일 아냐
입소문 날까 교권보호위도 꺼려…교육계 "피해 현황 파악, 대책 세워야"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광주·전남 교육계에서도 '학부모 갑질'로 인한 교권 추락을 막아야 한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설이 교육계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에서 확산하면서다.

광주·전남에서 교권 추락이 이슈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당시 이 교사는 학생들 간 싸움을 제지하다 교실 책상을 넘어뜨리고, '잘못한 게 없다'고 쓴 학생의 반성문을 찢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했다. 이 교사는 지난 4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학부모가 지난 5월 31일 검찰에 항고를 제기해 재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이 때 전국의 교사 등이 검찰 앞으로 "선생님은 잘못이 없다"며 탄원서 1800여장을 보내면서 교권 추락에 대한 논의가 확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5월 발표한 '2022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12건, 전남 8건 등 광주·전남에서 총 20건의 교권침해 상담이 이뤄졌는데, 이 중 75%인 15건(광주 8건·전남 7건)이 학부모에 의한 피해 사례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각 시·도 교육청에 접수된 교권 피해 신고도 증가세다.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 35건, 2021년 67건, 2022년 97건 등 최근 3년간 199건의 교권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에서 교권 침해와 관련해 교사가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은 건수는 2020년 626건, 2021년 1032건, 2022년 1223건 등 최근 3년간 2881건에 달했다. 접수된 피해 사례의 14배를 넘는 상담·치료가 이뤄진 것이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2020년 60건, 2021년 97건, 2022년 109건 등 총 266건의 교권 피해 사례가 접수됐으며, 상담 및 치료 건수는 2020년 43건, 2021년 61건, 2022년 66건 등 총 170건으로 집계됐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피해에 대비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세우고 전화상담, 법률 지원, 정신과 치료 지원,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권 침해 피해를 입증하려면 먼저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일선 교사들은 '학생·학부모와 갈등을 빚는 교사'로 입소문이 날까 두려워 교권보호위 개최를 꺼린다는 것이다. 또 교장·교감은 승진 점수가 깎이거나 최우수 학교에 뽑히기 위한 관리점수가 떨어질까 우려에 사안을 덮어버리려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교권 추락을 막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교사노조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마다 한두 건씩 학부모나 학생의 고질적인 민원으로 시달리는 교원들이 있다"며 "교원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학교장조차 원칙없이 '을'의 입장을 자처하고 있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삼원 광주교사노조 집행위원장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더라도 학부모들은 자녀 보호 차원에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기 일쑤고, 교사들은 소송전에 휘말리기 싫어 교권 침해를 참고 견디고 있다"며 "교육감과 교육청은 교원의 권리를 위해 장·단기 대책을 신속하게 내놓고 정책적·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세사기 '광주 빌라왕' 공범 3명 영장 신청
전세대출사기 21명 검찰 송치

일명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400여채를 구매해 480억원대의 사기를 벌인 전국 2위 '빌라왕'으로 추정되는 정모씨의 공범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임대업 법인 임원 A(34)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2~8월 이른바 '깡통전세'로 빌라 등을 임대해 총 108명의 피해자로부터 28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 등을 조사한 결과 A씨 일당의 범행을 확인했다.

이들은 노숙자 명의를 빌려 만든 회사를 통해 전세 만기일이 도래한 부동산을 재구매해 이를 다시 매매가 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깡통전세'를 양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차례 '무자본 갭투자'형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뒤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페이퍼컴퍼니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2차 전세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광주경찰은 수채의 원룸 건물을 가지고 청년전세대출 사기를 벌인 B(31)씨와 부동산 업자, 허위 임차인 등 총 21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 등은 2022~2023년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 서류를 제출해 인터넷 청년전세 대출금 14억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임차인을 구한 B씨는 거짓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으로 부터 7000만~1억원 가량의 대출금을 받아 임차인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차명 건물 및 타 지역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실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GS건설 광주 상무센트럴자이 무단 설계변경 혐의 검찰 송치

경찰이 기초공사 설계를 무단으로 변경한 GS건설과 시공사 현장소장을 검찰에 넘겼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광주 상무센트럴자이 시행사 GS건설과 시공사, 각 현장소장 2명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상무센트럴자이 기초공사는 당초 지반 위에 기둥형태 콘크리트 파일을 세우는 방식으로 설계됐으나 건설사와 시공사가 무단으로 콘크리트 파일 없이 바닥 면을 두껍게 시공(기초판)했다.

이를 확인한 광주시는 지난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질의해 광주시의 인허가 과정에서 부가적 약관에 '공법을 변경할 경우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을 토대로 주택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제의 판결

층간소음 항의 너무 심하면 '스토킹 범죄'
공포심·불안감 준 혐의…광주지법, 벌금 300만원·집유 1년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여·68)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9시 10분께 층간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위층 집에 쫓아가 "왜 시끄럽게 하느냐"며 "문을 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1주일 뒤인 25일 밤 11시 50분께 다시 20대 부부가 사는 위층 집에 찾아가 시끄럽게 한다며 밀가루 반죽 밀대로 현관문을 세게 두드렸다.

이에 위층에 사는 B(28)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 "드르륵 쿵, 드르륵 쿵 밤새 누굴 약올리냐"며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A씨의 항의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 10월 17일 오후 5시10분께는 또다시 B씨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5분을 기다렸다.

11월 9일 오전 6시 50분께는 같은 이유로 위층에 쫓아가 '밤새도록 운동을 하면서 시끄럽게 했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항의를 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4차례 위층에 올라가 강하게 항의한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A씨에 적용된 혐의는 '인근 소란'으로 인한 경범죄(10만원 이하 벌금)가 아니라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었다. 피해자들에게 상당기간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가 주장하는 층간소음은 실제로는 위층에 사는 피해자 부부들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과도한 항의로 B씨 부부가 겪은 고통이 컸을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이후 위층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